

르포 - 장성 삼서면 이상저온 낙과 피해 현장 가 보니

“농사 지어봤자 손해...살 길 막막하네요”

4월·지난달 17일 기온변화... 137농가 136만㎡ 피해

홍로사과 90%, 부사 50% 이상 낙과

전남도 등 지자체 선거 핑계 현황조차 파악 안해

“올해처럼 심한 낙과는 처음 봅니다. 농사를 지어봤자 손해볼 게 뻔한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22.7도까지 상승했다가 7일 뒤에는 6.3도까지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 같은 기온변화가 반복되면서 사과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8일 오후 장성군 삼서면 인근 사과 과수원에 만난 박래범(60)씨는 땅에 떨어진 사과 열매 수천개를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이씨는 “그동안 낙과 피해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올해처럼 심한 적은 처음이다. 특히 홍로 품종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올해 박씨는 지난해 수확한 1500상자(1상자 기준 15kg)를 넘어 내심 3000상자까지 생각했지만 수확을 하기도 전에 열매가 노랗게 변색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4~5월 전남지역에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례없는 사과 낙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씨의 사과 과수원(9917㎡)에는 막 영글기 시작한 자두 크기(지름 3cm) 사과 열매가 곳곳에 떨어져 있었다.

사과 낙과 외에도 각종 작물피해를 본 농부들은 “올해 농사 망쳤다”며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를 조사하고 피해지원에 나서야 할 전남도 등 지자체들은 6·13 지방선거 업무 등을 핑계로 피해현황조차 파

악하지 않고 있다. 10일 장성군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따르면 장성군 일대 사과 과수원마다 홍로는 90%, 부사는 50% 전후가 낙과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210개의 사과 농가 중 137 농가, 재배 면적인 227만㎡ 중 136만㎡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열매가 빨리 맺는 홍로의 경우 피해가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로는 부사보다 단맛이 뛰어나며 부사보다 2개월 빠른 9월께 수확해 ‘추석사과’로 유명하다.

특히 장성사과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고 인기가 좋다.

하지만 이번 낙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과를 추척 조사에는 좋은 사과를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설명이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청 등은 이번 사과 낙과 피해의 원인으로 극단적인 기상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신선정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 담당은 “사과 낙과 현상은 일조량 부족, 저

온 등 복합적 원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또한 사과와 같은 경우 바람이 아닌 근층에 의해 꽃가루가 운반돼 수분이 이뤄지는 종매화(繖繖花)인데, 지난 4월 갑자기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장성 뿐만 아니라 다른 전남의 지역들도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조사기간이 만료되고 추가로 이달 15일까지 기간이 연장됐지만 아직까지 피해 현황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기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군에서 선거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 현황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이상저온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접수돼 추가 조사기간인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전력공급 특수성 고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업 부장판사)는 홍로씨 등 시민 5천여 명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업 부장판사)는 홍로씨 등 시민 5천여 명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로씨 등은 한전의 주력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부당하고 주장하며 이 요금제를 통해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청구 금액은 26억여원에 달했다. 2016년까지 한전은 주력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가도 높아진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

이 60.7원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유원지 팔각정서 아동 추락

유원지 팔각정서 아동 추락

40대 남편 긴급체포

‘안전 소홀’ 관리자 벌금형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만난 아내에게 임신을 뿌린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지난 8일 A(여·38)씨의 몸에 임신을 투척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의 남편 B(4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8분께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법 목포지원 주차장에서 A씨의 얼굴·등·팔에 임신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명이 지장은 없으며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이혼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농민 박래범씨가 지난 8일 장성군 삼서면 자신의 과수원에서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나무 가지들 치고 있다. 이상저온 여파로 노랗게 변색된 뒤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

/장성=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농민 박래범씨가 지난 8일 장성군 삼서면 자신의 과수원에서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나무 가지들 치고 있다. 이상저온 여파로 노랗게 변색된 뒤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

/장성=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보훈의 달 쓸쓸히 떠난 50대 국가유공자

숨진 지 한달만에 발견

오후 5시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약취가 심하게 난다는 원룸 주인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서부경찰, 국립묘지 안장 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경찰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이모(57)씨를 발견했다.

군 북부 시절 총기 난사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50대 국가유공자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쓸쓸히 세상을 떠난 50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경찰은 원룸 주인 등 주변인의 진술과 심하게 부패한 이씨의 시신 상태로 미뤄볼 때 숨진 지 한달 이상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찰은 원룸에서 이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국가유공자증을 발견했다. 이씨는 지난 1980년대 초 군복무 도중 총기난사 사고로 전우를 잃고 자신도 다리에 총상을 입은 뒤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30년 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5년 전부터 가족 곁을 떠나 원룸에서 혼자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씨의 유가족이 장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레미조차 날 행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16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건네고 이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문의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청 차원에서 우체국 등과 연계해 ‘보훈가족 살피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법원 “주력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전력공급 특수성 고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업 부장판사)는 홍로씨 등 시민 5천여 명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업 부장판사)는 홍로씨 등 시민 5천여 명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홍로씨 등은 “한전이 주력용 전기요금 약관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전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규정이 위헌했다”며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로씨 등은 한전의 주력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부당하고 주장하며 이 요금제를 통해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청구 금액은 26억여원에 달했다. 2016년까지 한전은 주력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가도 높아진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

그러나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력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랐지만, 한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더 많다.